



추억 가득한 용천수 물놀이 20여 년도 더 이전의 구좌읍 월정리 용천수 모습이다.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 헤엄치던 어린아이들은 어느덧 청장년이 되어 있을 것.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가 영화 속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 2000년 초반 월정리에서 이창훈

제408회 임시회 개회, 역대 최대 규모 추경예산안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21일 제 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9일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한편 의원 발의 조례 11건, 도지사 제출 의안 18건, 교육감 제출 의안 15

건을 포함한 총 44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주도는 본예산 6조 3922억 원보다 8510억 원 증액한 7조 2432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최근 도의회와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힘내라!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700억 원이 담겼다. 도민 1

인당 1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오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도 반영됐다. 도교육청 예산은 당초 1조 3651억 원보다 2873억 원 늘어난 1조 652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초·중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 맞춤형 지원사업 31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의 효과가 애초 계획했던 대로 힘든 도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편성돼 있는지 살피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수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만큼 이들 세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면 안내

제408회 임시회 폐회 ▶ 2



주요 이슈 ▶ 4

상임위원회 활동 ▶ 5~7

생생 의정활동 ▶ 8~9

함께 합시다 ▶ 10~11

사무처 소식 ▶ 12

“도민 1인당 10만 원 8월 지급… 추경안 도의회 통과”

제408회 임시회 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29일 제 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주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8,510억 원이 늘어난 7조 2,432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추경안을 제출했고, 도의회는 107억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우선 오영훈 제주도정이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장은 “지금 제주농업은 영농 현장의 ‘신 3고(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면세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인상됐지만 도정에선 어떤 지원대책도 없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유류비뿐만 아니라 영농 자재비와 인건비 등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장은 개방형 전문직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김 의장은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개방형 직위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에 대해서도 논공행상과 보은성 임명을 지양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장은 “초반부터 협치가 매끄럽지 못한 듯해 많이 아쉽다”면서, “예산 확정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

전에 공고한 것이나,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선 의회와 소통이 없었고, 행정절차가 미흡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

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공직자들이 무능력한 건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오영훈 지사는 재선 도의원과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니만큼 철저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도지사를 제대로 보좌해 도정과 의정간의 협치를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김광수 교육감에게도 한마디 아쉬운 점을 건넸다.

김 의장은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해선 일부 공감하긴 하나 모든 사업엔 철저적 타당성과 효율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적 활용방안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 추진에 반영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김 의장은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최근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제주4·3 희생자 68명 중 4명에 대해 ‘사상 검증’의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분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이기에 4·3특별법과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기준에 따라 모두 재심을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의회-강원도의회 교류협력 간담회

강원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양 기관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김경학 의장, 김대진, 김항국 부의장, 송영훈 운영위원장,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 마포구의회의원 제주 찾아

서울시 제9대 마포구의회의원과 직원들이 의정세미나의 일환으로 7월 28일 제주도의회를 찾았다.

기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상호 간 교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인 의정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제12대 도의회 4·3특별위원회 본격 출범

위원장 한권, 부위원장 박두화 의원 선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22일 제 408회 임시회 제1차 4·3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4·3특별위원회는 한권 위원(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을 위원장으로, 박두화 위원(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수형인 명예회복,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정정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별 후속조치 이행을 비롯한 4·3의 주요 현안 및 미진한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동체 회복과 화합을 위해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제12대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4·3 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보다 앞선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11대에 이어 제12대에서도 4·3의 새로운 의제와 미진한 과제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4·3특별위원회 활동을 조

속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영훈 의원, 김경미 의원, 송창권 의원, 이승아 의원, 강연호 의원, 김창식 의원, 양병우 의원, 양영식 의원, 강충룡 의원, 한권 의원, 양용만 의원, 강동우 의원, 강경흠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4·3희생자 사상검증 중단 및 재심청구 보장 촉구 4·3특별위원회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8월 1일 ‘4·3희생자의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재심청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검찰이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 깊은 유

감을 표한다”며,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재심청구에 제동을 거는 것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들에 대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멈추고 재심청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공정한 절차로 재심 대상자의 죄가 없음을 속히 밝혀 도민 사회 화합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4·3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최선”

4·3평화공원 참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7월 29일 오전 4·3 평화공원 참배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 강봉직 위원, 강하영 위원, 고의숙 위원, 박호형 위원, 정이운 위원, 현기중 위원, 현길호 위원은 이날 4·3평화공원 위령제단을 찾아 참배하고 위패봉안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4·3특별위원회는 4·3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첫 공식 기구로서 4·3특별법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희생자 위령사업, 유족 지원, 진상조사 등에 앞장서며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과 늘 함께 해온 위원회”라며, “앞으로도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4·3 의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3 완전 해결 위한 적극적 의정활동 약속

활동계획서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7월 2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08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4·3특별위원회는 2022년 7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 활동하며,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보상절차 점검 및 지원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보완입법 추진 △보상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발굴 △4·3유적지 활성화 △

4·3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4·3 수형인 명예회복 △4·3의 올바른 역사 찾기(정명) △4·3의 전국화·세계화 추진 등이 있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은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조문별 개정사항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점검 및 지원을 비롯하여 보완 입법 등 4·3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4·3의 완전한 해결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의견개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제주도 107억 원, 도교육청 114억 원 조정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와 학력격차 해소 등 예산편성에 효율성과 사업의 시급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 사업의 불요·불급성, 절차적 타당성, 편성 근거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107억 77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청은 114억 4500만 원을 조정했다.

제주도 추경 주요 감액된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12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5억 원, △전세버스 리무진 좌석 구조변경 사업 5억 원, △지방도 포장 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 유지보수사업 3억 원으로 총 107억 7651만 원을 삭감하였다.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2017년 도입 이후 적자 보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재정 집행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세버스 리무진 사업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증액사업은 주민불편해소 사업 23억 3000만 원,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 간 확장사업 및 보행로 정비에 4억 2000만 원, 다랑쉬굴 4·3유적 정비사



업에 2억 5000만 원,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3억 4000만 원 등 총 107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다.

부대의견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 용역에 대해 도입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 아닌 제주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목적으

로 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함에 따라, 적절한 사업명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42억 원, △농어촌학교 통학버스(교통비) 지원 39억 1400만 원 감액하였다. 증액사업으로는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18억 4100만 원, 교육환경개선 16억 4200만 원 증액하였다.

부대의견을 통해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명을 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으로 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12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 첫 예산심사로 심사숙고를 거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고시가 이루어졌다. 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간이 짧았다는 점에서 예결위는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다소 빈약하더라도 삭감하지 않으려고 했으며, 지금 막 출발한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평가했다.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를 마무리하며 “어려운 시기에 올라온 첫 추경안만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꼼꼼히 심사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확정된 집행부의 각종 사업이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 재유행 발생을 대비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역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 달라”고 당부하였다.

“8·15 광복절, 강정주민 사면·복권 특별 건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7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안으로 마련해 통과시켰다.

그동안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추진 당시 강정마을은 많은 아픔을 겪었고, 국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강정주민 253명에 대해 사면·복권함으로써 여전히 도민의 아픔으로 남아 있다. 결의안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해 사면·복권을 결의, 정부에 제출하고자 마련됐다.

결의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2년 2월 5일 강정마을 방문 시 약속한 사면·복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반드시 지켜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촉구했으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강령에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 강령에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천명하고 있음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당차원에서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 관련부처는 국정목표인 ‘국민대통합 시대’를 위해서라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된 갈등의 산물인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해 ‘국민대통합 시대’를 적극 추진하기를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4·3의 아픔을 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해결하여 서로 상생과 화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면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253명에 달하는 주민이 사면·복권됨으로써 여전히 도민의 아픔으로 남아있어 정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해당 지역구 의원인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예레동 지역구)이 본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강정주민과 도의회 간 가교역할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면서, “도의회에서도 정부차원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향후 의지를 밝혔다.

의정역량 강화 워크숍, 제1회 추경예산 등 논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7월 21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원과 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2대 의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정 주요 현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김인성 전문위원의 제주발전을 위한 위원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도정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심사를 앞둔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소관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답 찾는다, 복지 현장 간담회 활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월 2회, 도 어린이집연합회 및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유관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현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재 추진 상황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심도 있는 논의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사회복지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문 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기후위기 선도적 대응, 기본 조례 시급 제정 필요”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지역 신교통 수단으로 제시된 트램 도입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는 7월 22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번 용역은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개월간 총 5억 원을 투입, 트램 도



입과 관련해 사업 가능성 및 방식, 비용 대비편익(B/C) 확보 가능 노선, 역세권 개발 및 기존 대중교통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주 15분 도시’가 있다.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교통수단을 갖고 15

분 도시를 만들지 기본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순서가 맞지 않다. 15분 도시 구성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안에서 어떻게 수소 트램이나 대중교통을 활용해 생활권을 조성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각 실국에서 실적 위주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은 “트램은 제주의 청정

미래를 지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업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8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이다. 앞으로 ‘제주 15분 도시’ 관련 용역도 진행될 것 아닌가”라며, “오영훈 도정 내에 반드시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도시계획 골격을 형성하는 기본계획 결과가 나온 후 트램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피력했다.

그런가 하면 “트램 도입 논의는 우근민 도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 당시 타당성이 낮아 추진되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트램 관련 사업을 놓고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트램의 정상 운영을 위해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시스템도 함께 변해야 한다”며, “관련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수소연료, 전기 등 어떤 방향으로 갈지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추진

철새도래지 등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를 보전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월 22일 개최된 제408회 제주도의

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1차 회의에서 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송창권 위원장(사진)은 “행위 규

제만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니 개발압력이 발생할 때마다 저항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환경 보전에 있어 행정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감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이라고 말했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으로, 제주도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용역비가 그대로 통과되면 제주도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2개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자연과 부조화’ 돌문화공원 내 전기셔틀차 논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7월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통합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돌문화공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기셔틀차와 관련해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돌문화공원은 공영 관광지로서 1999년 1단계 사업에 411억 원, 2006년 2단계 1차 사업에 217억 원, 2012년 2단계 2차 사업에 821억 원이 투입돼 총 1449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지난해에는 교통약자를 위해 힐링 전기셔틀차 3대가 도입돼 운



영되고 있다. 의원들은 “돌문화공원에는 현재 3대의 힐링 전기셔틀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3대가 증차돼 총 6대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3대가 추가적으로 운영되면 관람객들의 편의와 힐링이 공

존하며 돌문화공원의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 필요악과 같은 존재”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돌문화공원의 공간이 아주 경이롭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돌문화공원

이 추구하는 명품공원이 되기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소한 부분으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운영되는 힐링 전기차가 주변 경관과 이질감이 있어 명품공원으로서 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교통약자를 위해 전기셔틀차 3대가 도입됐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일반인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현무암 돌을 통해 구현한 오백장군과 돌박물관, 제주초가와 용기항아리 등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고 아름답게 다가오는 곳이 상업성이 짙은 사업 관광지로 변할까 우려스럽다. 가급적 인공물 설치하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 “농업인 지원 대책 필요”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국민의힘·표선면)는 7월 22일 제408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원들은 “고유가 시대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세유 중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사용량이 가장 많은 등유도 74%나 증가하면서 농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농업 분야에 대



한 지원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 사업인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외에는 마땅한 지원 사업이 없다”며,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농가 부담이 증가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유가 시대에 맞춰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은 98억 원이나 반영하고 있다”며,

“농업용 면세유도 심각한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연호 위원장도 “제주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급격히 상승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행정에서 적극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이 농업 분야 불요불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 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 농촌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요 정책방향 점검, 정책대안 모색

농수축경제위원회 워크숍 개최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 위 위원들은 소속 전문위원 및 정책 연구 위원들과 함께 7월 5일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장에서 ‘농·수·축·경제 분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수·축·경제분야의 상임위 소관 주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학습의 장으로 계획되었다. 특히 워크숍 주제를 농축산업, 해양수산, 미래산업과 지역경제의 3개 분야로 설정하고 정책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질의답변 및 자유토론으로 올해 하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각 분야별 의정활동의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 되었다.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농어업인 및 영세 소상공



인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제주 발전을 위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차원의 정책 대안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기가지원 사업 사전계획 부족 예산 삭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광수 교육감 취임 이후 도의회에 최초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사과정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이 집중 논의되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초·중학생 스마트기가지원 사업’은 사전 계획 부족 및 효과성 문제로 초3 태블릿 지원예산은 감액하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노트북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집행 근거 부족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근거 조례가 우선



제정된 이후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올해 2월에 근거 조례가 제정된 읍면중학교 학생의 통학지원을 위하여 4억 8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다.

특히 ‘고3 학생 진로진학비 지원 사업’은 당초 김광수 교육감이 도내 고3 학생의 도외 대학 진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가 모든 고3 학생에게 도외 방문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사업명과 세부내용이 엇박자를 이룬 것에 대해 심사 과정에 질타가 이어졌는데,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주의 특성상 도외 대학 진학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3 학생 진로진학비’ 사업비로 5억 원으로 조정하면서 동시에,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 수능 이후 ‘고3 체험 활동비’로 16억 9120만 원을 증액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지난 코로나 2

년간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고3 학생들에게 수능 이후 진로 체험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고3 진로진학비 지원도 가능하게 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함으로써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에 조금의 위안이라도 되고자 한다”고 하면서, 태블릿 지원사업의 경우 초3 학년은 태블릿 활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제공하고 오히려 초4 학년에 태블릿을 지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의 역대급 추경규모인 2873억여 원이 증액된 예산의 심사결과 교육위원회에서는 초·중학생 스마트기가지원 사업 4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개 사업에서 94억 4500만 원 감액하고, 교육환경개선 등 9개 사업에 33억 원 증액하고, 나머지 증액분 61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이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축소에 대비토록 주문했다.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



강철남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읍)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채무상속 등으로 파산신청을 했으며, 이는 미성년자 파산 신청 건이 1달에 1명이 발생한 셈이다. 파산 처리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빚 상속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 추정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라며, “우리 제주 아동·청소년이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게 되어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통해 제주 아동·청소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본 조례가 제주 아동·청소년들에게 ‘빚’이 아닌 ‘빚’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해야”



현지홍 의원

보건복지안 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동·봉개동)는 지난 22일 제408회 임시회를 속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기준 제시 ▲피해 보상 로드맵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 절차 촉구 ▲백신 부작용 전담 콜센터 및 지정병원 선정 ▲유족·피해자 보상 및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금 지급 촉구 등 특별법

제정 촉구 내용이 담겼다. 현지홍 의원은 “도내 백신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 중 심의가 완료된 건 모두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문제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과성 인정 사례 및 개연성의 해석 차이로 인해 ‘회색지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의원은 “다양한 백신 이상반응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결의안은 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홍식·홍인숙·현기중·이상봉·한권·한동수·하성용·이남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도시재생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 정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마련한 도시재생 사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담회가 7월 2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강경문 의원은 “제주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최초로 신산모루와 모관지구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면서, “사후관리계획 수립과정 중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사후관리계획과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이 발표된 시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하

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후관리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행정 지원해주고, 재식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해 운영되고 있다.

강경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장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 사후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는 강경문 의원을 비롯해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천지·서흥), 현기중 의원(국민의

힘, 성산읍)이 함께했으며, 제주도 및 행정시 관계자와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장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관계자를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지역 주민 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발족

국민의힘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초선 도의원 8명은 지난 7월 21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제주도당 대회’ 종료 후 초선의원 모임을 발족, 이정엽 의원(대륜동)을 대표로 추대했다. 간사에는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이 선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 제주도의원들은 앞으로 연찬회 등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각종 현안 발생 시 의견

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정엽 대표는 “다양한 연령대의 초선의원들이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표 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의회가 보다 더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 도의원은 강경문 의원(비례대표), 강상수 의원(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흥동), 강하영 의원(비례대



표), 양용만 의원(한림읍), 원화자 의원(비례대표), 이남근 의원(비례대표), 이

정엽 의원(대륜동), 현기중 의원(성산읍)이다.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제주’ 포럼 개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여성가족 연구원과 공동으로 8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제주’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와 저출생 시대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백영경 교수가 ‘전환의 시대, 돌봄사회 제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에 나

섰고,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원 연구위원과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토론의 좌장을 맡고, 민복기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센터장, 박정경 별난고 양이꿈발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이화선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센터장, 양금선 제주YWCA 통합상담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돌봄사회 제주의 미래를 위한 다



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사회적 변화에 맞춰 갈 수 있는 제주형 돌봄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노인 복지 지원 활성화’ 정책토론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함께 8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장수노인 복지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제주지역의 80세 이상 장수노인의 성별·지역별 생활실태를 분석했으며, 장수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호형 의원은 “어떻게 하면 건강장수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수노인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르신들의 필요로 하는 복지 욕구가 반영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 역시 “본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 장수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증진 위한 간담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8월 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현황과 증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7월 20일 ‘배달 직종 근로청소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보상 역시 외면받고 있다는 현실에 따라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쉼터, 제주도청 관계자와 함께 근로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 근로청소년의 사각지대 현황 파악과 함께 근로계약이나 산재보험 적용 실태, TF구성 등에 적극적인 개선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 관련 조례 개정 등 정책적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학교현장 ‘발로 뛰는 소통’ 의정 구현

김황국 부의장, 한라초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동선거구)은 8월 2일에 한라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의장은 ‘소통으로 교육현안 해결 일사천리로’ 의정활동 슬로건을 기치로 학교현장의 목소리 듣고자 인근지역 학교에서부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 번째 순서로 이날은 발로 뛰는 학

교 현장 한라초등학교에 다녀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라초 구성원들인 양동렬 교장, 이병진 교감, 양은숙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회 송경미 위원장 및 장성호 부위원장, 학부모회 정미희 총무 및 최윤정 재무, 아버지회 문창훈 회장 및 김대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고 간 교육현안들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공간 부족,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 악화, 2011년 개교 후 학교실내 환경 노후 등으로 시



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장기적으로 처리해 나갈 현안을 구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일사천리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황국 의원은 교육청에서도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만큼 교육가족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현안을 일사천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Q&A



Q 외부강의 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료강의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는 제외).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 등은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 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 외부강의 등의 요청처(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 & 법령뉴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Q 민박집을 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4.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5.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신기한 제주어 ㉔

유리창

시상 속에 신 나가 바깥도로 나완 보난
창 바깥덜 보난 시상 속에 신 나가
시상 바깥디 신 나가 시상 바깥디 신 나를 또시 보네
나를 보고 잇네

(유리창)

세상 안에 있는 내가 / 창 밖을 보니 /
세상 밖에 있는 내가 / 나를 보고 있다 /
밖으로 나와서 보니 / 세상 안에 있는 내가 /
세상 밖에 있는 나를 또 본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월별	회수	회기	의사일정	주요 처리 안건
계	11회	총137일 • 정례회 2회/58일 • 임시회 9회/79일	본회의 34일 상임위 50일 예결위 17일 공휴일 36일	
2월	제402회 임시회	2.8.(화) ~ 2.17.(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결산검사위원 선임
3월	제403회 임시회	3.22.(화) ~ 3.30.(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404회 임시회	4.25.(월) (1일)	본회의 1일	• 안건 처리
5월				
6월	제405회 임시회	6.14.(화) ~ 6.21.(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 8월	제406회 임시회	7.1.(금) ~ 7.6.(수) (6일)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공휴일 2일	• 의장·부의장 선거 • 제12대 의회 개원식 • 원구성 등
	제407회 임시회	7.11.(월) ~ 7.18.(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주요업무보고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408회 임시회	7.21.(목) ~ 7.29.(금)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예결위 3일 공휴일 2일	• 제1회 추경예산안 • 안건 처리
9월	제409회 제1차 정례회	9.16.(금) ~ 10.12.(수) (27일)	본회의 8일 상임위 5일 예결위 4일 공휴일 10일	• 도정·교육 행정질문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410회 임시회	10.18.(화) ~ 11. 9.(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11회 제2차 정례회	11.15.(화) ~ 12.15.(목) (31일)	본회의 8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 도정·교육 행정질문 • 2023년도 예산안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12회 임시회	12.19.(월) ~ 12.23.(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 제2회 추경예산안 •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9일
※ 연간 의사일정은 현안사항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빛나는 제주 만들기 위한 첫걸음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공직자의 헌신과 감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감사 부담은 여전히 크고, 적극행정의 성과가 중앙 부처에 집중되면서 지방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높지 않다. 적극행정이 인정될 때는 마일리지 부여하고,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보상을 주는 것이다. 부서장 및 내·외부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나 공무원들의 창의성, 전문성 발현 등 적극행정을 정착시키려는 노력



조 홍 석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주무관

**'적극행정' 강조
공직자 역량 강화**

의 하나다. 또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면책 등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컨설팅과 법제교육 등 공직자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했다. 첫 번째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도지사는 위대한 도민시대를 위한 공직자의 '헌신',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 '사람 냄새'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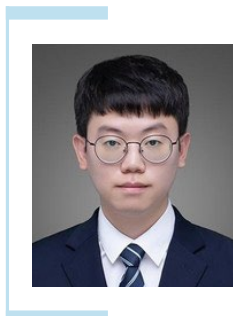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발굴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도록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실천을 기대해 본다.

자동차 소유자, 필수 의무사항 확인하자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검사가 지연됐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돼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 유효기간 종료일과 검사 지정업체 조회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김 진 홍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자동차 정기검사 확인
안전한 교통 환경 확산**

지 또는 서귀포 시청 홈페이지내 분야별 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차량 운행할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의무보험'은 필수이다. 차량을 가만히 세워두었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자동차 소유주라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해

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은 미가입 일수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30만 원, 자가용은 최고 90만 원, 영업용은 최고 23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시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인 만큼 나에게도,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 모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나 홀로 가구에 조그마한 관심 절실

나 홀로 가구란 1명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과거에는 대가족의 형태로 몇 식구가 한 집에 모여 살기도 했지만 산업과 도시가 발전하면서 핵가족이 보편화됐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나 홀로 가구는 핵가족 형태를 넘어서서 가족, 식구라는 개념 없이 혼자서 사는 사람을 말한다.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년층 및 고령자 홀로 가구의 고독사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해 2022년 특화사업으로 홀로 가구 반려 식물로 외로움 달래기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판 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 인 희
제주시 연동
맞춤형복지팀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

연동 지역 내 혼자 거주하는 장년층 50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 50가구에 반려 식물을 전달해 정서적 안정과 활기찬 생활을 돕고자 추진했다. 가족 및 이웃과 접촉이 적은 홀로 가구에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식물과의 교감을 통

해 외로움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식물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동 관내 편의점, 슈퍼, 약국 등 생활밀착형 장소에 "우리 주변에 위

기가구를 찾아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현판을 부착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삼촌돌보미 등 사회적 안전망과의 협업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홀로 사는 분은 없는지, 위기가구는 없는지 살피는 조그마한 관심이 모여 위기 이웃 발굴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이 따뜻한 지역사회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안에서 구상까지 청년자율예산제도

제13회 청년정담회 개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연동을, 더불어민주당)는 7월 29일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3회 청년정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정담회(青年情談會)는 2015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준비 당시부터 제주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획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청년당사자 논의구조로, 현재까지 총 13회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제13회 청년정담회는 지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의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들이 청년 참여예산제도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당해연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그 다음 해에 집행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청년원탁회의 등에 참여하여 제안한 정책이 실제 실현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예산을 풀(Pool)성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13회 청년정담회에서는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의 ‘청년 참여의 새로운 도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도입 사례’ 발표와 강보배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청년주권을 위한 청년자율예산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제주청년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참여해 토론이 마련됐다.

청년정담회를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한권 의원은 “제주도정이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 실행에 적극 동의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오늘 의 자리를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바로 스스로 집행해 볼 수 정책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책 참여 효능감을 높여, 더 많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은 내가 도의원” 청소년 의정체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의정체험 참가 신청방법은 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u.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공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로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일반)단체 등 20명 이상 45명 이하의 팀 단위로 신청

을 받았다. 의정체험 운영기간은 의회운영 일정을 고려해 회기가 없는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조례안 찬반토론 및 표결, 5분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모의의회 운영과 도의원과의 만남 등으로 이루어진다.

김경학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 배려, 존중과 신뢰 중심 조직문화 조성”

8월 공감·소통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가 8월 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경학 의장은 “조선 의원 비중(55%)이 많다 보니 의회 시스템이나 도정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부족할 수 있어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에 있어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직원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가운데 업무의 효율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조직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존중과 신뢰임으로 각 부서에서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민·예술인 함께 즐기는 문화정책

문화정책 공청회 열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오라동)가 마련한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를 위한 문화정책 공청회가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민선 8기 문화예술분야 공약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현재 문화예술분야 정책을 진단하고 도민과 예술인들이 제안하는 의견이 제주도정의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승아 위원장은 “이번 민선 8기에서 제안한 101대 공약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는 4개로 제안됐다”며, “그러나 공약들이 과연 제주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 발굴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스

러운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아 위원장은 “예술인들을 비롯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시점의 문화예술 정책을 진단하고 도민과 예술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주관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도민과 예술인들의 귀한 의견들이 민선 8기 문화예술공약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보완 역할을 하여 도민과 예술인들이 진정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김미영 도 문화정책과 과장이 ‘민선 8기 ‘문화예술’ 공약 소개 및 추진 상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후 사전에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도민, 예술인 등이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